

참여하다 연결하다 확대하다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연대에
기초해 참된 주민자치를
실현하는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입니다.

대전을 사람의 만남이 아름다운 도시로, 열린시대 새 지방자치를 만들어갑니다.

시민참여

- 활동 경비 전액을 회원의 회비, 후원 사업 등 순수한 시민의 힘으로 마련합니다.
- 대가성있는 후원금은 절대로 받지 않습니다.
- 회원이라면 누구든 모임에 주인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시민연대

-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편견과 이기심의 벽을 넘어야 희망이 있다고 믿습니다.
- 연대는 서로 다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같은 지향점을 찾으려 노력합니다.

시민감시

- 권력의 횡포가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달려갑니다.
- 부정부패, 국민 위에 군림하는 사법, 도덕성을 잃어버린 기업활동 등에 대해 시민의 눈이 되어 감시하고 견제합니다.
- 시민 제보, 정보공개청구, 공익 소송, 시민 입법 운동 유권자 운동 등 시민의 뜻을 관철할 수 있는 창조적 방법을 찾아 실천합니다.

시민대안

-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각종 대안을 연구하고 주장합니다.
- 각종 지역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과 대안 제시 운동을 벌입니다.
- 참여자치연대에 참여하고 있는 각계 전문가와 함께 시민적 대안을 만들어갑니다.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연대에 기초해 참된 주민자치를 실현한다.

참여하다**연결하다****확대하다**

전략

권력감시 운동에 참여

누구나 시민활동가

조직 확대

주민참여제도에 참여

다양한 연대

활동방식과 반경 확대

단체 활동에 참여

세부 과제

[시의회 모니터링]

8대 시의회 전체 회기의
모든 회의록을 검토하고
모니터링 합니다.

[지방선거 대응팀]

다가오는 지방선거,
시민이 정치의 주인으로
참여하고 함께할 방법을
고민합니다.

[주민자치회]**주민참여 예산제 참여]**

주민자치 실현을 위해
마련된 제도가 제대로
실현되기 위해
함께합니다.

[시민활동가 확산]

단체 활동가가 아니더라도
본인의 활동을 만들고 싶은
시민들의 의지를 응원하고
지원합니다.

[정보공개 청구]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투명한 행정을 위해
주민들과 함께 다양한
정보공개 청구 활동을
진행합니다.

**[의제별 권력감시,
의제별 수다회]**

노동, 인권, 성평등, 환경 등
다양한 의제와 연대하고
함께합니다.

[모금 확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국가 보조금 없이
시민의 후원 만으로
운영됩니다.

[청년이 함께하는 단체]

변화하는 시대,
다양한 회원들이 함께하는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를
위해 노력 중 입니다.

[온라인 기반 강화]

다양한 매체와 도구들을
활용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할 수 있도록
활동 반경을
넓혀가겠습니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연혁 [1991~2009]

1995	참여자치대전시민회의(옛 명칭) 창립
1996	본격적인 정보공개운동 시작 1998년부터 정부공개법이 시행
1997	시민을 위한 시내버스 개혁 운동 시작 무료환승시스템 등 시내버스 서비스 개선
1998	장애인 주차권과 보행권 확보를 위한 다양한 활동
1999	도박 도시를 막기 위한 장외경마장 유치 반대 운동
2000	부패 정치인 낙천 낙선을 통한 정치개혁 운동 자치단체장 업무추진비 공개 운동.
2001	아파트 부당전기료에 맞선 합리적인 요금 현실화 운동
2002	시내버스 무료 환승시스템 도입 촉구 급행버스시스템(BRT) 도입운동
2003	대전 경륜장 반대운동을 통해 사행산업 규제법 촉구
2004	신행정수도 지속추진운동 / 대전마을어린이도서관 건립운동
2005	신행정수도 등 지방분권을 위한 3대 입법제정운동 : 지방분권, 분산, 균형발전 및 행정도시 건설의 기반
2006	빈곤 노동 교육 의료부문 등 사회양극화 실태조사 : 사회 양극화 실태를 확인하는 시발점
2007	주민참여예산제 도입 운동
2008	중학교 학교 운영 지원비 실태 조사
2009	대전광역시의회 파행 규탄 및 정상화 촉구 활동

2010년 부터 성명·논평으로 본 우리단체

1장 행정감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행정권력을 시민의 눈으로 감시합니다.

2장 지방의회 감시

지방의회 정상화 활동과 지방의회 감시 활동을 진행합니다.

3장 연대 활동

산내 민간인 희생자, 월평동 화상경마장 등 지역주민과 함께 대전을 바꾸는 활동을 합니다.

4장 인권·노동·정책

인권침해 사례 공론화, 노동자들의 노동권 보장, 학생인권 보장 활동을 비롯하여 대중교통 정책 및 다양한 정책제안 활동을 합니다.

5장 주민참여

일상속에서 주민이 참여하고 주인으로서 살아가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1장 행정 감시

대전의 변화와 함께하다

친환경 무상급식 예산 편성 요구,
대학생 학자금 이차지원 조례 운영 요구 등
10년 전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도 함께 요구했었습니다.

-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의 예산축소로 파행 운영 불가피,
대전시는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 (2010년 3월)
- 대전시와 교육청은 친환경 무상급식 예산 즉각 편성하고
대전시의회는 무상급식 예산 즉각 반영하라! (2010년 9월)
-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우리의 입장(2011년 2월)
- 거꾸로 가는 5개 구청 불법 주차 단속,
말로만 선진 주차 행정 (2011년 5월)
- '대전광역시 대학생 학자금 이차지원에 관한 조례'
운영하지 않는 것에 대한 입장 (2011년 8월)
- 들러리 위원회로 전락시키고 있는 대전시,
5개 구 주민참여예산제 조례 실패 (2011년 9월)
- 인사청문회 및 인사공시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합니다
(2011년 9월)
- 2011년 대전시정, 성과 보다는 논란이 컸던 한해
(2011년 12월)
- 행정정보공개 비율도 높다지만, 아직도 뻗뻗하거나
주먹구구식 운용 (2011년 12월)
- 악질적인 업무추진비 관행을 규탄한다! (2012년 2월)
- 대전도시철도역사 역무원 친인척 인사 의혹에 대한
우리의 입장 (2012년 3월)



1장 행정 감시

예산을 들여다 보다

초등학교 학습준비물 구입비에 대한 감시활동으로
부당하게 사용되던 예산을 바로잡았습니다.

-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일부개정에 대한 우리의 입장 (2012년 12월)
- 대전아쿠아월드 관련 대전지검 수사결과 발표에 대한 우리의 입장 (2012년 12월)
- 대전광역시교육청 초등학교 학습준비물구입비 모니터링 결과 발표 (21013년 6월)
- 근본대책도 없이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 대전시를 강력 규탄한다! (2013년 6월)
- 대전지역 141개 국공립 초등학교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보고서 (2013년 7월)
- 과학벨트 수정안 제안 진실 논란에 대한 우리의 입장 (2013년 7월)
- 대전 5개구청 주정차단속 실태조사 결과 (2013년 7월)
- 대전 141개 국공립초등학교 학습준비물 분석결과 발표 (2013년 7월)
- 지방자치 근간을 흔드는 취득세 감면 조치 철회하라. (2013년 7월)
- 주먹구구식 전시행정의 대표사례
중구 사계절 스케이트장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합니다 (2013년 8월)
- 되풀이되는 관행 타파위한, 특단의 행정·경영쇄신 촉구한다! (2013년 8월)



1장 행정 감시

행정 개혁을 요구하다

대전지역 공사공단 인사청문회 감시 활동을 통해 공정한 인사행정을 요구했습니다. 채용비리 사건에도 적극 대응했습니다.

- 대전광역시교육청과 일선 초등학교의 학습준비물 결산 차액에 대한 공익감사청구를 합니다 (2013년 9월)
- 동구청의 민원인 개인정보공개에 대한 우리의 입장 (2014년 3월)
- 학습준비물 구입비 전용에 대한 우리의 입장 (2014년 4월)
-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후보자 인사청문간담회에 대한 우리의 입장 (2015년 5월)
- 대전도시철도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간담회에 즈음한 입장 (2015년 8월)
- 권선택 시장의 인사청문간담회 향후 대책 지시에 대한 우리의 입장 (2015년 9월)
- 정보문화산업진흥원 신규직원 채용 과정 의혹에 대한 긴급 성명 (2015년 9월)
- 갑천도시고속화도로 통행료 인상계획에 대한 우리의 입장 (2015년 10월)
- 대전도시철도공사 채용비리에 대한 우리의 입장 (2015년 12월)
- 대전도시철도공사 채용비리 신고자 해임에 대한 우리의 입장 (2016년 4월)
- 대전도시철도공사 사장 후보자 채용과정에 대한 우리의 입장 (2016년 8월)
-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진실규명을 위한 청와대 압수수색 진정 (2016년 10월)



1장 행정 감시

행정 개혁을 요구하다

메가스포츠 경기, 대형 자본의 건설 사업, 임원추천위원회 등 다양한 감시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 대전광역시 및 5개 구청 주차 단속 실태조사 결과 (2016년 11월)
- 권선택 시장은 대전광역시 행정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 (2017년 2월)
- 대전시는 혈세 먹는 하마인 2030년 아시안게임 유치 검토를 중단하라. (2017년 3월)
- 대전시는 현대백화점이 제출한 아울렛 제안서를 반려하라! (2017년 3월)
- 유성복합터미널 사업을 무산시킨 행정시스템에 대한 점검과 대책을 마련하라! (2017년 6월)
- 대전도시공사 사장 문제에 대해서 권선택 시장도 자유로울 수 없다 (2017년 7월)
- 문제는 임원추천위원회다. 임원추천위원회 추천방식을 개선하라! (2017년 7월)
- 대전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의 공사.공단 임원추천위원회 정보공개 재결을 환영한다! (2017년 8월)
- 대전광역시 4개 공사.공단 임원추천위원회 분석 내용 발표 (2017년 9월)
- 대전광역시는 2030 하계 아시안게임 유치 전면 철회하라 (2019년 2월)



1장 행정 감시

행정 감시는 진행 중

출연기관들의 문제적 운영을 지적하고, 위원회와 업무추진비의 투명한 공개를 요구했습니다.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활동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 대전광역시는 안영생활체육시설단지 인조잔디 관련 의혹을 밝혀라 (2019년 3월)
- ‘대전시 보조금 지원시설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동의안 철회 과정을 명백히 밝혀라! (2019년 4월)
- 대전광역시는 철저한 감사를 위해 정관성 대표이사를 업무 배제하라. (2019년 6월)
- 대전도시철도공사 사장 내정자 인사청문간담회에 대한 우리의 입장 (2019년 9월)
- 대전시 기관장 인사, 언제까지 회전문, 둘러막기로 일관할 것인가. (2020년 10월)
- 명분없는 중소벤처기업부 이전계획 철회하라 (2020년 10월)
- 대전 동구청 일감몰아주기 의혹 밝히고, 수의계약 개선대책 마련하라. (2020년 11월)
- 대전광역시는 2027년 하계유니버시아드 유치 계획을 철회하라(2021년 3월)
- 대전 안산첨단국방산업단지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 제보 요청(2021년 3월)
- 대전광역시 위원회 관리 부실(2021년 6월)
- 대전광역시 3개 공사, 1개공단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공개기준 미달 (2021년 6월)



2장 지방의회 감시

시민을 위한 지방의회

지방자치의 정착과 시민을 위한 지방의회 활동을 위해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지속적으로 목소리 내고 있습니다.

- 중구의회 업무추진비 부당사용은 명백한 범죄행위이다 (2012년 1월)
- 대전광역시의회 해외연수 장도금 문제, 또 어물쩍 넘어가려는가? (2012년 2월)
- 업무추진비 사용 조례 제정과 상식적인 사용을 촉구한다! (2012년 2월)
- 시의회 업무추진비 분석결과와 올바른 업무추진비 사용을 위한 제언 (2012년 5월)
- 1인당 195만원의 해외연수 강행하는 동구의원들은 주민의 대표기관 자격이 있나? (2013년 8월)
- 대전시의회의 해외연수 부실보고서 대필에 대한 우리의 입장 (2014년 2월)
- 업무추진비 부정사용 의혹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한다! (2014년 12월)
- 서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방청거부에 대한 우리의 입장 (2015년 12월)
- 서구의회 공무국외연수에 대한 우리의 입장(2016년 4월)
- 대덕구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주민이 살펴봅니다 (2017년 6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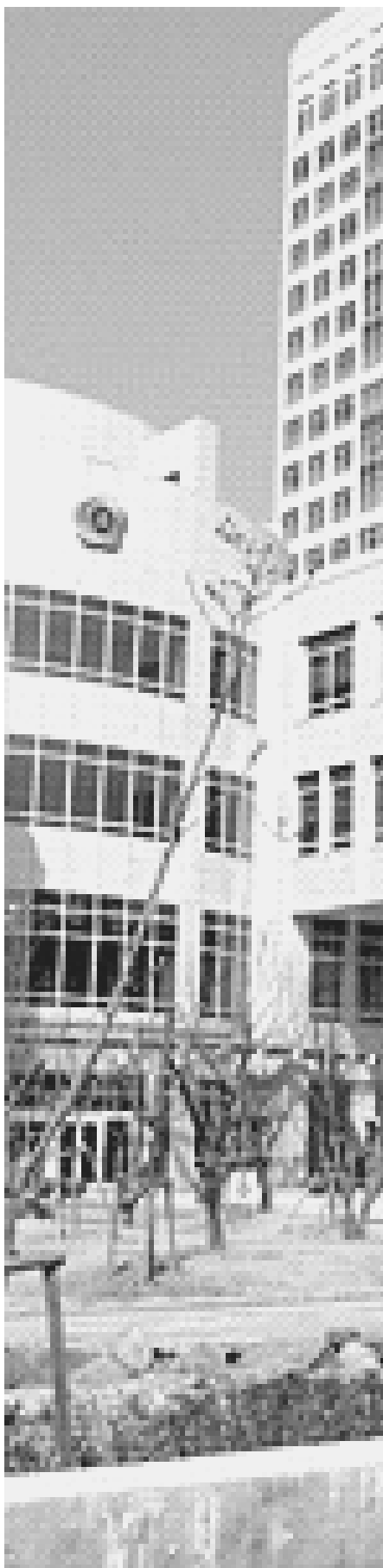


2장 지방의회 감시

시민을 위한 지방의회

지방자치의 정착과 시민을 위한 지방의회 활동을 위해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지속적으로 목소리 내고 있습니다.

- 민의를 대변하는 대전광역시의회가 되기를 바란다!
(2018년 7월)
- 제8대 중구의회 7월분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 반납 관련 질의 결과 (2018년 7월)
- 제대로 검증 못한 대전광역시의회 인사청문간담회, 철저하고 정밀하게 다시 거듭나야 한다 (2018년 9월)
- 진정한 자치분권을 견인하는 대전광역시의회가 되기를 바란다! (2018년 10월)
-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박찬근 의원 성추행 논란에 대한 우리의 입장 (2019년 6월)
- 대전광역시 중구의회는 보궐선거 미 실시 결정에 대한 이유를 밝혀라 (2019년 7월)
- 대전지역 20대 국회의원 팩트체크보고서 (2020년 2월)
- 더 많은 의정활동 평가 논의를 기대한다 (2021년 2월)
- 보다 더 꼼꼼한 입법평가가 필요하다 (2021년 2월)



2장 지방의회 감시

지방의회 정상화 활동

주민들을 위한 지방의회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도록 반복되는 원구성 파행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 밀실, 담합, 당리당락, 뒷거래, 배신, 야합의 우리지역 지방의회 원구성 과정을 규탄한다! (2010년 7월)
- 지방의회 원구성 과정의 파행을 막을 특단의 대책 있다!
- 동구의회 의원 구성에 대한 우리의 입장
- 상임위원장 선출방식 개정 요청에 대한 회신 결과
- 원구성때마다 나타나는 추태에 시민은 지겹다.
(2012년 7월)
- 유성구 의회의 의정비 반납 결단을 촉구한다!
(2012년 11월)
- 파행중인 서구의회 의원 정상화를 촉구하는 우리의 입장
(2015년 12월)
- 7대 대전광역시 하반기 원구성에 부처
(2016년 7월)
- 중구의회 의원 구성 파행에 대한 우리의 입장
(2018년 07월)
- 대전광역시의회와 더불어민주당 대전광역시당은
원 구성 파행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2020년 7월)



2장 지방의회 감시활동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

행정사무감사는 대전광역시의회가 대전광역시와 대전광역시 교육청의 정책 감시와 행정 견제인 의회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대전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2010년부터 『행정사무감사 대전시민네트워크』를 결성하였습니다. 2010년부터 매년 대전광역시 의회가 정책감시와 행정견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감시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링은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는 약 10일간 4개 상임위원회별로 방청을 통해 진행됩니다. 모니터링 참가자들은 각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방청하고, 질의와 답변에 대해 기록합니다. 이를 기초로 각 의원들의 전문성, 구체성, 대표성, 태도를 평가합니다.

[행정사무감사 대전시민네트워크]는 모니터링에 참여한 활동가가 매일 기록한 위원별 점수와 전체모니터링단이 모인 평가회의를 통해 우수 위원을 선정합니다.

2020년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 결과보고서 확인해보기

<https://me2.kr/vg2j6>



3 장 연 대 활 동

지역 연대 활동

지역주민들과 함께 대전의 다양한 문제에 우리단체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산내 민간인 학살 희생자 지원 활동

- 열 번째 대전산내학살 사건 희생자 위령제 개최
(2009년 7월)
- 산내 민간인 희생지 안내판 설치 거부 동구청 규탄 기자회견
(2010년 6월)
- 대전 산내학살사건 진실규명 결정 (2010년 7월)

친환경 무상급식 활동

- 김신호 교육감은 친환경 무상급식 예산 즉각 편성하고
대전시의회는 무상급식 예산 즉각 반영하라!
(2010년 12월)
- 친환경무상급식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에 함께 해 주십시오
(2011년 1월)
- 늦었지만 대전시의 친환경 무상급식 시행선언을 환영한다!
(2011년 3월)

월평동 화상경마장 외곽이전 및 폐쇄 주민대책위원회

- “월평동 주민은 두 번 속지 않았다. 복합문화공간이 아니라
외곽이전을 추진하라” (2016년)
- 월평동 화상경마도박장을 확장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2016)
- 지역사회를 황폐하게 만드는 화상경마도박장을 추방하라
(2016)
- “월평동 화상경마장 폐쇄에 따른 주민대책위 해단식”
(2021년 3월)



3 장 연 대 활 동

지역 연대 활동

지역주민들과 함께 대전의 다양한 문제에 우리단체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도시 공원 난개발사업 반대 연대활동

-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개발사업 즉각 중단하라. (2017년 2월)
- 월평공원 대규모 아파트 건설사업 즉각 중단하고 도시공원 전반에 대한 계획을 마련하라! (2017년 3월)
-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 문제해결에 대한 더불어 민주당 대선후보 질의 (2017 3월)
-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 및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개발사업 대규모 아파트 건설사업 전면 재검토하라. (2017년 7월)

더 좋은 민주주의를 위한 정치개혁 활동

- 비례대표 확대를 위한 2015 정치개혁대전시민연대 발족 (2015년 9월)
- 여야의 선거구획정 개악에 대한 우리의 입장 (2016년 2월)
- 대전시 선거구획정위원회 개최에 즈음한 우리의 입장 (2017년 11월)
-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재의를 촉구한다!! (2018년 3월)
- 연동형비례대표제, 민주당과 한국당은 결단하라 (2018년 11월)
-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당리당락 앞세우지 말고 민의 그대로 반영하는 선거제도 개혁에 나서라! (2019년 1월)
- 위험적인 비례위성정당을 즉각 해산하라 (2020년 3월)

4장 인권·노동·정책

인권 보장

사람이 행복한 도시 대전을 위해 시민들의 인권향상과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활동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 원주민들의 주거권 및 생존권을 적극 보장할 것을 약속하라!!! (2010년 5월)
- 대형마트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부터 배워라 (2012년 10월)
- 대전시는 공익제보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 (2013년 3월)
- 인권도시로 가는 첫걸음! 대전인권사무소 설치 결정을 환영합니다.(2013년 10월)
- 시민의 당연한 권리를 무시하고 민원인을 압박한 동구의회 의장은 즉각 사과하라!(2014년 10월)
- 대전고등학교 재학생들의 의사표현의 자유 등 제한 우려에 대한 입장(2015년 8월)
- 대전학생인권조례 공청회 무산에 대한 우리의 입장 (2016년 4월)
- 삼성동 노인무료급식소 설치에 대한 우리의 입장 (2016년 12월)
- 대전광역시는 긴급재난수당을 편성·지원하라(2020년 3월)
- 최저임금 준수, 방법은 무엇인가 (2010년 12월)
- 건양대학교에서 장애인이 일할 곳은 없는가 (2012년 10월)
-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자살, 근본대책 마련하라! (2012년 3월)
- 허태정 대전시장의 첫 노동정책은 생활임금 임의 삭감 (2018년 10월)

4장 인권·노동·정책

정책 제안

감시를 넘어 다양한 대안들을 고민하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 월평동 마권장외발매장 문제해결을 위한 토론회 (2012년 5월)
- 전국 꼴찌 수준의 국공립어린이집! 공공보육 확대를 위한 계획을 만들어라! (2013년 10월)
- <긴급>대전마권장외발매장 확장계획을 즉각 중단하라! (2013년 12월)
- 시민을 도박중독에 빠뜨리는 마권장외발매장 확장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2014년 1월)
- 소통 없이 진행하는 3기 지역사회복지계획, 부실을 우려한다! (2014년 10월)
-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의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발표에 대한 입장 (2014년 12월)
- 보육안전성 확보를 위한 토론회를 진행합니다. (2015년 3월)
- 지역복지 축소에 찬성한 새누리당 시의원들을 규탄한다 (2015년 11월)
- 대전광역시, 대학생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조례 유명무실 (2015년 12월)



4장 인권·노동·정책

정책제안

감시를 넘어 다양한 대안들을 고민하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 대전권 철도(KTX, 도시철도 2호선)정책 질의 결과 (2016년 4월)
- 대전광역시 인사청문간담회 개선방안 토론회 개최(2016년 4월)
- 도시철도 2호선 가수원역-서대전역 착공 연기에 대한 우리의 입장 (2016년 5월)
-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017년 7월)
- 대전광역시 청년정책 모니터링단 결과 보고서 (2018년 10월)
- 공공어린이재활병원, 병상확대가 우선이다.(2019년 3월)
- 대전복지재단, 개혁이 필요하다. (2019년 4월)
- 대전광역시는 공공교통 강화를 위한 교통정책을 제시하라 (2020년 5월)
- 소통협력공간 감사를 통해 행정의 난맥상을 해결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2021년 2월)



4장 인권·노동·정책

대중교통

더 나은 대중교통 환경을 위해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 대전도시철도 역장 특별채용 전면 재검토하고 공개채용 하라! (2010년 1월)
- 시내버스 업체의 편법운영에 대한 대전시의 지도관리감독을 촉구한다! (2010년 2월)
- 6.2지방선거 도시철도 2,3호선 건설 논쟁 (2010년 4월)
- 자전거 타는 시민이 본 대전시 자전거정책토론회 (2010년 4월)
- 대전광역시 버스운송사업조합 사태에 대한 우리의 입장 (2010년 6월)
- 대전시 도시철도 2호선 도입, 이의 있습니다. (2011년 4월)
- 대전시내버스의 시계 외 요금의 조정이 필요하다. (2011년 7월)
- 세종시 통근버스 운행에 대한 우리의 입장 (2012년 7월)
- 대전도시철도 바로알기 시리즈 1, 2, 3 (2013년 4월)
- 2030 대전 대중교통계획에 대한 우리의 입장 (2014년 2월)
- 소비자정책위원회의 대중교통 요금 인상 결정에 대한 우리의 입장 (2015년 5월)
- 대전도시철도 2호선 타당성 재조사 결정에 대한 입장 (2018년 1월)
- 대전지역 시내버스 회사의 방만한 운영에 대한 우리 입장 (2019년 4월)



5 장 주민 참여

주민 참여

유권자의 권리를 확대하고 일상속에서 주민이 정치에 참여하고 직접 우리지역을 만들어가자는 주인으로서 함께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 2010대전유권자희망연대 결성 기자회견 (2010년 4월)
- 대전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 이제는 투표참여 캠페인까지 문제삼나? (2010년 5월)
- 제18대 대통령선거, 투표참여를 호소합니다.(2012년 12월)
- 정치권의 대전 선거구 증설 약속에 대한 우리의 입장 (2014년 4월)
- 투표는 민주시민의 기본, 민주주의와 민생을 위해 투표합시다!(2016년 4월)
- 대전시의회는 민의를 반영한 기초의원선거구 확정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 (2018년 1월)
- 대전시티즌 선수선발 청탁의혹 시민 제보에 대한 우리의 입장 (2019년 1월)
- 대전광역시는 시민을 위한 주민참여예산 교육을 실시하라 (2019년 4월)
- 4월 일상을 바꾸는 누구나 시민활동가 시즌1 사업 (2019년 5월)
- 주민자치의 시작은 투명한 정보공개 (2021년 7월)



참 여 자 치 시 민 상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지난 1997년부터
지역에서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고, 불법, 부당, 불합리한
정부와 자치단체의 정책에 맞서
자신과 이웃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싸워온
숨은 시민, 공무원, 지역활동가 등을 찾아
그 노력을 격려하고 알리기 위해
‘참여자치시민상’을 제정, 시상하였습니다.

2010년 제14회

‘행정도시무산저지 범충청권비상대책위원회’ 공동집행위원 ‘홍석하’씨
‘홍석하’씨는 균형발전정책의 핵심인 행정도시 추진과 관련하여 정부가 행정도시 수정을 통해 원안을 왜곡, 폐기하려는 긴급한 상황에서 지역의 주민들과 전국의 시민 사회단체, 자치단체와의 연대활동을 통해 반대여론을 형성하였다. 뿐만 아니라, 행정도시 원안 추진이 정치적, 정책적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들의 삶과 밀접한 문제임을 인식하여 끊임없이 이들을 조직하여 누구보다 우수한 현장활동가로 만들어 행정도시 원안추진운동이 지속적으로 진행되도록 하였다.

‘주은 반석아파트 임차인대표회의’

2008년 2월 부도 등의 상황 속에서
영세 서민인 자신들의 보증금이 떼일 처지에 놓이자, 대덕구청의 공무원과 함께 전국 50여 곳의 영세한 부도임대아파트 입주인대책모임을 만나 네트워크를 구성하였다. 이후 '부도난 공공건설 임대주택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에도 힘써 전국 3천가구, 1만여명이 임대보증금을 되찾을 수 있는데 도움을 주었다.

참 여 자 치 시 민 상

2011년 제 15회

대전MBC 시사플러스

대전MBC 시사플러스'는 지역사회의 이슈와 현안에 대한 심층보도를 통해 지역의 여론을 환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지역의 심층보도프로그램과 시사프로그램이 장수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을 제작, 방송한 것은 지역언론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 것이라 평가할 수 있습니다.

서구청 도시관리과 여운창 계장

‘서구청 도시관리과 여운창 계장’은 재건축지역에 거주하는 세입자에 대한 손실보상을 실시하면 사업자에게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을 ‘2020 대전도시재정비기본계획’에 포함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는 사회적 약자인 지역세입자의 권리를 제도개선을 통해 보장한 사례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2012년 제 16회

한국타이어 노동자 집단 사망사고를 최초 고발한 해고노동자 정승기씨

한국타이어 노동자의 집단사망 사건을 폭로하여 전국민적인 공분을 불러일으키며, 직장 내 작업환경을 개선하는데 크게 기여한 ‘한국타이어 집단사망 원인규명 및 책임자 처벌추구 시민대책위원회’의 해고노동자 정승기씨를 선정.

정승기씨는 한국타이어 노동자 집단 사망사건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며 언론에 사측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지난 2010년 3월 부당해고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지난 2011년 10월 4일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부당해고로 복직판결을 받았으며, 앞서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각각 복직판정을 받았으나 복직이 이뤄지지 않아서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정문 앞과 서울 본사를 오가며 복직투쟁을 전개했습니다.

참 여 자 치 시 민 상

2013년 제17회

동네자치구현의 모범사례를 만든 [서울아카데미 주민자치대학]

서울아카데미 주민자치대학은 평생학습시대를 맞아 주민들의 참여를 통한 동네자치 구현을 목적으로 전문가를 강사로 초청하여 정치, 경제, 국제사회, 주민자치, 역사문화, 건강, 자녀교육 등 다양한 주제의 강좌와 문화기행, 현장체험학습을 진행했습니다. 특히 인근의 대전대학교와 연계하여 교육의 질을 높이고, 평생교육시대에 대처하는 선진자치교육과 지역주민역량강화를 통해 주민중심의 의식변화를 유도하여 동네자치의 모범사례로 정착하였습니다.

2015년 제19회

월평동 화상경마장 폐쇄 및 외곽이전 주민대책위원회

월평동 화상경마장 폐쇄 및 외곽이전 주민대책위원회 위 기관은 화상경마장으로 인한 도박중독과 삶의 터전 파괴를 막기 위해 주민과 지역단체가 연대하여 화상경마장 확장을 저지했습니다. 이후에도 화상경마장 폐쇄와 외곽이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활동하여 시민의 힘으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모범사례를 만들었습니다.

(사)대전산내사건희생자유족회

(사)대전산내사건희생자유족회 위 기관은 한국전쟁 당시 국가공권력에 의한 민간인학살의 진실을 규명하고 희생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활동해 왔습니다. 누구도 말하지 못한 민간인 학살의 진실을 끝까지 파헤치고 이를 평화와 화해의 계기로 만든 공로를 높이 평가합니다.

대전어린이재활병원시민추진모임

대전어린이재활병원시민추진모임 위 기관은 중증장애아동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재활치료를 위한 전문병원이 한 곳도 없는 상황에서 각종 캠페인을 통해 중증장애아동들이 처한 현실을 시민에게 알리며 대전어린이재활병원 설립의 필요성을 적극 홍보하고 모금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이를 통해 대전지역의 소아낮병동확대와 건양대학교병원과 보람병원에 병원학교가 생기는 데 기여했습니다.

참 여 자 치 시 민 상

2016년 제20회

대전유성 민간원자력환경·안전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

조례제정청구 운동본부

유성민간원자력환경안전감시운동본부는 2015년 2월부터 지역 25개 시민 단체·정당 등이 함께하며 2015년 12월 유성구의회에서 주민 발의 조례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했고, 2016년 1월 유성구가 이를 공포하는 성과를 거둬 참여하는 시민행동의 모범 사례입니다.

2017년 제21회

친환경무상급식대전운동본부

친환경무상급식 대전운동본부는 지역 초·중학교 친환경무상급식 실현을 위해 대전시와 시의회, 시교육청과 적극적인 정책 협의를 통해 대안을 제시하며 참여하는 시민행동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참 여 자 치 시 민 상

2018년 제22회

故 이명영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지난 3년 동안 으능정이거리에서 매주 빠짐없이 세월호 희생자를 추모하는 '노란 리본'을 나눠주며 진상 규명을 위해 노력했을 뿐 아니라, 갑천친수구역 개발, 월평공원 대규모 아파트 건설 저지 등 지역 현안에 빠지지 않고 함께 하며 참여하는 시민행동의 모범을 보였습니다.

2019년 제23회

누구나 정상회담@대전시민기획단

위 기획단은 “누구나정상회담@대전”프로젝트가 시간과 장소, 형식과 규모에 제한 없이 누구나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 곳곳에서 함께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민협약으로 2018년 지방선거 대전광역시장후보, 교육감 후보의 시민이 주인되는 지방정부운영협의를 이끌어냄으로써 시민정치플랫폼을 실현시켰습니다.

참 여 자 치 시 민 상

2020년 제24회

둔산 녹원아파트 주민들

둔산 녹원아파트 주민들은 입주자대표회의가 경비 부담 등을 이유로 경비실 에어컨 설치문제를 부결시키자 안건을 주민투표에 부쳐 에어컨 설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파트 경비 아저씨도 우리 가족이라고 주장한 주민의 모습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진정한 의미의 참여 민주주의와 공동체 정신을 되새기게 하는 시민 행동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2021년 제25회

마스크를 만든 활동가들

위 사람들은 코로나 19로 인해 모두가 힘들어 하는 상황에서 마을에서부터 문제를 해결하자는 생각으로 마스크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마스크 부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이웃을 돕는 의미와 더불어, 사회문제를 자발적으로 해결해나가는 사회혁신의 모습이었습니다. 사회적 위기상황에서 자발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마을활동가들의 모습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진정한 참여민주주의 정신을 되새기는 시민행동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지원

0%

정기 및 일시후원 안내

cham.or.kr /

042-331-0092

<https://me2.kr/q36lm>

